

# 친환경제품만이 살아남는다

플라스틱 창호시스템을 개발하는 독일 위더홀트(Wiederhold)사는 유럽의 높아 가는 환경규제의 벽을 피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대신 자체적인 환경개선과 비용절감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폐창문을 100%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독일시장을 선점하는 등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하는 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www.kotra.or.kr, 사장 : 吳盈敎)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70%인 207억불이 환경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들의 환경규제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환경규제로서는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 및 폐차처리지침'으로 각종 가전용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특히 많은 품목들의 경우 수출업체들이 이제 판매된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국제적 환경규제를 선도하면서도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환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각종 관련업계로 구성된 품목별 전문가를 환경청내에 두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관련 조치나 지원정책 입안 시 패널의 사전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수시로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저리융자방식 지원에 머무는 반면 독일 등 선진국은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상품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사전적인 환경규제 극복노력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환경경영 및 환경친화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제량 통상전략팀장은 말하고 있다.

환경상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관심과 시장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절약형 소비재, 에코라벨 부착품목 등에 대해서는 환경친화 기업의 호소평과 인터넷 상거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초기 지원 시스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는 PC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PVC의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므로 대신 PE, PP, PET 등을 사용하거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연페인트, 목재창문, 전기절약 센서, Non-Allergic 의류, Eco-디자인 제품, 기타 다양한 소비재 제품 등을 유망환경상품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럽의 각 지자체에서는 사무용 문구, IT기기, 종이, 위생제품 등을 유망 환경상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